

우

리는 전기를 평생직업으로 택하면서 한점의 후회없이 살아가기 위해 한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어 돛을 올리고 항구를 출항하여 목적지를 향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배는 항구를 출항하고 나서 항해중에 풍랑을 격고 또한 대양의 큰 파도를 거치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동안 수없는 고초를 격을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면 이 배는 침몰합니다. 그러나 배가 침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협회는 배이면서 선장입니다.

의무고용완화에 대한 우리의 마음자세



글/황 광 목(기획과 차장)

회원인 우리 전기기사들은 협회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협회의 의침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의무고용제의 폐지”라는 대양의 큰 파도는 한 때 거쳐간듯했지만 목전에 다시 닥쳐 왔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반복하여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서 그동안 의무고용제 완화에 관련된 일지를 요약하여 봅시다.

1993. 2. 15 한국무역협회는 대행범위를 현행 1,000kW에서 2,000kW로 완화해 줄 것을 동자부에 건의

동자부 관련부서는 대행범위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코자 하였고 이에 본 협회는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즈음에 EXPO 전기설비에 대하여 동자부·한전·협회·안전공사 등은 합동점검팀을 구성, 점검을 하게 되었는데 필자도 여기에 참석했다.

당시 EXPO 전시장의 전기설비 관리를 용역업체에서 관리하였는데 시설의 부실이 현장에서 확인되어 안전관리의 부실을 우려, 동자부는 대행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였다.

1994. 7. 행정쇄신위원회는 행정쇄신타점 과제로 대행범위를 1,000kW 미만에서 1,500kW 미만으로 확대 결정

협회는 이에 불복, 행정쇄신위원회에 이의 신청 재심을 요청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쇄신 실무위원회 담당과장을 찾아가 협회 상근이사, 직원 및 지부장 등 10여명이 면담하였고 힘으로 저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로 인해 행정쇄신위원회는 대행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였다.

1995. 11월에는 행정쇄신위원회가 대행범위를 2,000kW로 확대 검토를 통산부에 요청하였고 관련 자료를 제출요청

그동안 대행범위가 1,000kW에서 2,000kW로 확대검토가 현행대로 유지, 다시 1,000kW에서 1,500kW를 확대 결정, 현행대로 유지 등 같은 사안이 반복되니 이는 행정업무의 모든 사안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한번 다루어진 사안이 또다시 다루어져서는 아니되며 이는 행정력의 낭비이다.

정부의 행정규제는 모든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사항은 당연히 규제완화 및 철폐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이게 과연 행정규제인지 행정완화인지 또는 행정부재인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1995. 12. 1 대통령훈령 제60호에 의해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이 설립

현행 행정규제완화 관련 검토위원회를 보면 통산부내 기업규제심의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실의 행정쇄신위원회가 있는데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단장으로한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이 설립된 것이다.

최근 행정쇄신위원회의 활동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추진에 따라 정부의 관련 기관 및 민원부서에 무차별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기획단의 첫 프로젝트가 "산업안전 관련 규제완화"인 것이다.

기존 각 규제완화위원회에서 다룬 것이 전면 무시되고 다시 검토되는 것이다. 산업안전 규제완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 여러 법령상의 관련 인·허가 제도는 전부 폐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심사로 일원화하고
- 사업장 내의 설치설비에 대한 검사·보수 및 관리의 검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고
- 의무고용자 제도를 철폐하고 1인의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용(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하여)

- 의무교육은 최초 선임시 1회로 한정하였다.

199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는 청천병력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산업안전규제완화 대책방안을 상공부담당자와 만드느라고 철야작업을 하였고 25일은 상공부 전력국이 전원 출근하였으며 협회의 상근이사와 필자 또한 작업을 계속하였다.

26일은 기획단에서 주관하여 내무부, 상공부, 노동부 등과 산업규제완화 관련 회의가 있었다.

회의결과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산업규제 완화가 추진될 것임으로 결론이 났다.

협회는 비상이 걸렸다. 연말연시는 매일 철야를 할 정도로 자료작성에 임했다.

먼저 논리적인 입장에서 의무고용제 필요성에 대한 자료가 작성되었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으로 상근이사와 필자는 담당과장을 만나 의무고용 폐지검토에 대해 반박을 했다.

재정경제원에서 파견된 기획단 담당과장은 미국의 자율에 의한 제도를 가지고 논리를 폈고 우리는 일본의 예와 한국인의 의식구조 및 사고발생 우려를 강조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형국이다.

우리는 협회에 와서 전략을 구상하였다.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및 의무고용에 대한 검토자료를 재 작성하였고 민자당 및 각 정당에는 회장이 뛰고 청와대 및 국회의원 299명에게 산업안전규제완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협조 요청하였다.

협회 회장은 회장대로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동분서주하였다.

의무고용폐지에 대한 반대논리를 홍보하기 위해 전 회원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전 회원을 정신무장시키기 위한 조치다.

전기관련 단체장에 대해서도 회장은 협조를 구했다. 전기학회, 전기공사협회 및 전기협회 등 관련단체에게 청와대로 의무고용반대 폐지민원을 제출토록 협조를 부탁한 것이다. 또한 에너지안전협회와 공조하여 여의도 집회를 구상하였다.

협회는 전국의 각 전문대학·대학교에도 공문을 보냈고, 에너지경제신문에서는 학계, 단체의 의무고용폐지 관련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신문에 의무고용제 폐지 반대 호소문을 게재하였다.

통상산업부는 나름대로 전기기사협회·안전공사·에너지관리공단·가스공사 등과 함께 계속 관련자료 작성하여 기획단에 올리고 다시 협의하고 통산부 전체가 매달리다시피하여 의무고용폐지반대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단과 통상산업부 및 관련단체의 싸움인 것이다. 이 싸움은 3, 4개월을 지속하였다.

기획단의 산업안전규제완화가 검토되면서 처음 산업안전규제완화가 일부 규제만 완화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어 통산부 자원정책실에서 방안이 만들어졌고 기획단에 보고됐다.

이 안이 기획단 단장 결재가 나고 대통령 재가 중이었다. 그런데 4. 28 대구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기획단의 산업규제완화 추진이 물거품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대통령 결재가 났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동년 6. 29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처절한 사고가 벌어진다. 이어 의무고용제 등 안전에 관한 규제완화는 거론이 되지 않는 듯했다.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최근들어 행정규제완화위원회 및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 규제완화를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민정 07000-118('96. 1. 22)에서 민원으로 이첩된 공문 첨부 서류에 청원서를 보고 기절초풍할 일이 발생했다.

“망둥이가 뛰니까 전라도 빗자루도 튄다고”

민원이면 만사해결 통하는 줄 아는가? 경남 울산의 대행업체 사장이 전기안전관리자 의무선임제도를 폐지토록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 부양정책으로 중소기업체장의 목소리가 높아져 항시 의무고용폐지와 같은 민원을 만들어오더니 아니 다른 분야도 아니고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의무고용제도로 대행업체를 설립,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대행업체사장이 의무고용제폐지 민원을 제출하다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에 대한 평가는 회원에게 맡겨야 할 것 같다.

이제부터 협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통산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통산부는 의무고용제도를 다시 검토하여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올려야 한다.

의무고용제완화가 다시 재론된 것이다.

의무고용제는 안전관리를 위해 전기는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고, 또한 수용가 구내에서 합선·누전사고가 나면 파급정전사고를 일으켜 다른 공장 및 일정구역도 정전되어 생산중단, 국민생활의 불편, 복구손실 등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1932년부터 제도화한 것이다.

의무고용제도 완화 검토와 같은 비생산적인 업무의 반복은 인력낭비는 물론 정부의 세계화를 위한 앞걸음을 자꾸 뒤로 끌어당겨 뒷걸음치게 하는 것이며, 관련단체의 손실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다.

'96 병자년 새해부터 똑같이 시달려야 하는가?

그렇다고 내팽겨치면 걸잡을 수 없이 밀고 들어오는 중소기업 진흥정책에 의무고용은 일순에 폐지되고 그러면 국가적인 대형사고는 반복되겠지?

여기서 회원여러분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정신적인 무장과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여 주셔야 한다는 것이다. 나 한사람의 자리를 의무고용제도가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는 보장이 안됩니다.

나 한사람이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인재로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정, 사회,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가 됩시다.

그러면 협회란 배는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할 것입니다.

